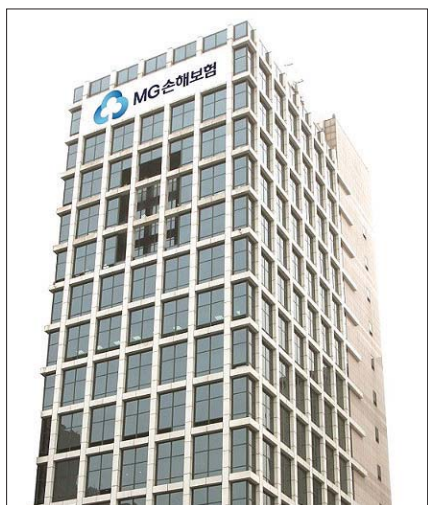


위기의 MG손보,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이 관건

2400억 유상증자 약속 못지켜 금융당국 ‘경영개선명령’ 조치 내달 26일 경영계획서 제출해야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으며 막다른 상황에 처했다. 최근 MG손보는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지급여력(RBC)비율이 100%를 넘기면서 명령 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전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MG손보는 대주주 변경, 자본확충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등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MG손보가 지난달까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금융당국과의 약속 시한을 넘긴 결과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 문제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다.

시장에서는 MG손보가 경영개선명령 조치까지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최근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RBC비율도 100%를 넘어서면서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는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리치앤코, JC파트너스 등도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분기 RBC비율이 86.5%로 떨어져 금융당국에 경영개선안을 제출했던 MG손보는 올해 3분기 108.4%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100%를 넘겼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MG손보는 RBC비율이 80%대로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후 금융당국으로부터 2400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받았으나 증자 작업이 지연되면서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MG손보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새롭게 제출한 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경영진 교체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MG손보에게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대주주를 기존 자베즈파트너스를 대신해 JC파트너스로 변경하기 위해 준비 작업

중이다. MG손보의 법률적 대주주는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이 SPC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주주다.

다만 JC파트너스를 GP(업무집행사원)로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영개선명령 이행계획을 내기 전까지 증자가 이뤄지면 당국에서 명령요구 철회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상 60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MG손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계획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성실하게 경영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오늘도 더워요 낮 최고기온이 24~31도로 평년(24~29도)보다 더울 것으로 예보된 1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관계자가 식물에 물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모디노믹스 탄력... ‘인도주식’에 돈 몰린다

〈인도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

상반기 해외투자자금 13조원 달해 미중 무역분쟁에 ‘대체시장’ 주목

올해 상반기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인도 주식에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경제의 고성장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재집권에 따른 정책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27일 기준) 해외 투자자금이 사들인 인도 주식은 114억1500만달러(약 13조 2003억원) 규모에 달했다.

지난 1월 외국 투자자들의 인도 주식을 소폭 순매도한 이후 2월부터는 대규모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어 5월 미·중 무역전쟁 재개로 다른 신흥국에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갈 당시에도 인도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졌다.

인도 주식에 글로벌 자금이 유입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재집권에 따른 모디노믹스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모디노믹스는 모디의 경제정책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수혜를 볼 수 있는 중국의 대체시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7.3%에 달하는 등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돋보이는 국가인 데다 5월 총선을 앞두고 모디 총리의 연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모디노믹스 정책 연속성이 확보되면서 친기업, 친시장적인 정책 성향과 함께 오는 2024년까지 약 100조 루피(약 168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한 만큼 인도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인도 증시의 주요 지표인 섹스시지수는 올해 들어 지난 6월 27일까지 9.8%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 코스피 상승률(4.6%)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미국, 유럽은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의 증시까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무너지는 와중에도 인도 증시만 유독 튼튼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반도체 생태계 성장 기회삼자” 주장도

» 1면 ‘경제로 번진 외교갈등...’서 계속

한편, 업계에서는 수출 규제가 우려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일본 소재 업체가 매출 상당부분을 국내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일본 역시 수출 규제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도.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실제 수출 규제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만약 수입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3개월여 기간이 남아있다.

오히려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3개월여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고 처리 기회일 수 있다는 의미다.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 하락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도 크다. 국내 반도체 재료 장비 업체가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업체에 밀려 성장할 계기를 찾지 못했지만, 이번 사태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앞서 반도체 업체는 국내 장비와 재료 업체 육성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국

내 제품 비중을 높이며 노력해왔으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도 같은 맥락으로 조성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체는 벤더사 다양화를 목표로 생태계 활성화에 힘써왔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 만큼 다소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로 국내 장비 재료 업체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 분명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건은 인재다. 업종 특성상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인재 양성 기관은 턱없이 부족했다. 최근 활발하게 추진 중인 반도체 인력 양성 전략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 관심도 중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업체는 이미 정부에 생산성 평가 등 정책을 통해 적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경쟁사들과 격차가 큰 탓에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체가 완전하게 독립하려면 재료 장비 업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 인력이다. 정부 지원이 이어지면 반도체 산업 전망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재용 기자

“과감한 투자로 기업 성장배경 마련해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정부에 조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과감한 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한상의는 앞서 매년 세법 개정 전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 사항을 전달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R&D 인정

통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모디 총리는 지난 집권 기간 동안에도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인프라 건설 등 기업 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했다.

높은 경제성장률도 한 몫 한다. 인도 경제는 2014년 이후 연평균 7%대의 고성장세를 이어왔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한상의, R&D 인정범위 확대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 제출

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 94개 과제를 담았다.

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발전의 기반인 신성장기술 투자는 세제지원의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향상과 R&D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세제의 투자인센티브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건의 안건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다. 신성장 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 5~1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10%에서 3% 완화하고, 고용 유지 요건을 전사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달라는 게 골자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지만, 신성장 R&D 전담 인력에 한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기관과 위탁하는 개발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신청률이 낮다. /김재용 기자 juk@